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2008년 정치 경제 전망

- △ 사회 : 인 수 범(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 발표 : 정 영 태(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정 태 인(민주노동당 서민지킴이 본부장)
- △ 토론 : 손 석 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조 원 희(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일 시 : 2008년 1월 31일(목)
- 장 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주 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이명박 정권과 정치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영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 내지 정책기조와 리더십은 향후 4년여 간 한국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우선, BBK특검조차도 작년 12월 검찰수사결과와 별다른 결론을 얻을 것 같지 않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총선에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은 ‘야당’인 통합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은 강력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선이나 대선자금 등을 둘러싸고 탈당 내지 분당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한때 분당 위기까지 초래했던 국회의원 공천을 둘러싼 내분을 무사히 잘 넘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어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수년간의 한국정치를 전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리더십 스타일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치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 각 정책과제의 내용을 가늠한 뒤에 한나라당과 국정 운영에서의 리더십 스타일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유한 정책기조와 리더십 스타일에 따른 예상되는 모순 내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진보진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트리클다운 이론(Trickle-down theory)

먼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보기로 하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주의의 심화나 남북협력을 통한 자주통일국가의 실현 또는 보편적 사회복지국가체제의 구축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최우선 시하는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시대적,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기도 하다. 당선 확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이때 선진화는 정치의 선진화가 아니라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선진화”, 보다 정확하게는 ‘연간 7%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747”)의 실현을 의미함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성장 전략은 ‘분배 우선’도 아니고 ‘분배와 성장의 병행’도 아닌 ‘성장 우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경제의 선진화(성장)를 통해 삶의 선진화(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10월 18일 <매일경제>가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성장과 복지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낡은 생각”이며 “양극화 문제는 복지정책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성장

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상승”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져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결과 소득향상과 내수회복이 가능하고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관은 1981년 민주당으로부터 권력을 탈환한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의 신보수주의적 경제정책이 기반을 둔 ‘공급측면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또는 ‘레이거노믹스’(Reagonomics)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완화 및 감세 → 투자 증가 → 일자리 및 소득 증가 → 사회양극화 해소 → 내수회복 → 성장 및 투자 증가’의 선순환을 신봉하는 레이거노믹스를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트리클다운이론’(trickle-down theory)이라고도 한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정책

이런 이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투자심리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를 위해서 노동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의 감세, 탈규제와 민영화 등을 통한 선진국 수준 규제개혁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할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의 이유로 대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력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도 잘 될 수 있다는 명분을 들고 있고, 국내 산업대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금산분리 원칙 폐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국내산업자본의 ‘역차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이 모두 대기업 특히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임은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¹⁾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경제정책을 ‘신발전체제’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제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듯이, 자유무역론자다. 따라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면, 중국이나 인도 등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도 곧바로 추진할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다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국가로 중국보다는 인도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²⁾ 다른 하나는

- 1)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의 생각을 이어받아 ‘친기업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의 창업부터 운영, 수익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 기업의 ‘시작’과 ‘끝’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 걸쳐 전방위적인 친기업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부처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완화(1월3일, 금융감독위원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제도 규제완화(1·5, 공정거래위원회), 정기 세무조사 대폭 감축(1·6, 국세청) 등이 연일 발표됐다. 또 기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듯한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정치 그들을 벗어나 경제살리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1·5, 국정원), “대기업 수사에서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1·6, 법무부)고 주문하는 등 앞뒤 가리지 않고 ‘기업 보호’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히 친재벌정책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라고 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재 인수위의 경제정책은 ‘친기업’이 아니라 ‘친재벌’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가 중소기업의 세제나 연구개발 지원을 얘기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구조라는 게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겨레신문, 2008. 1. 8)
- 2)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007년 4월 12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인도경제인연합회에서의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 역사적인 관계가 깊고 현재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는 매우 급속도로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협력관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자인 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사한 분야에서 같이 경쟁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못지않은 인도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한국과 인도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고, 상호 협력은 양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와 한국이 한국과 중국보다 앞서 FTA를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이나 세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노동자들을 많이 고

자유무역협정은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대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자유무역론도 결국은 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제일주의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07. 10. 16)을 변형함 것임.

신자유주의적 원칙의 확대 적용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원칙을 정당과 행정조직의 운영, 교육과 사회복지 등 다른 정책에도 그대로 확대, 적용하려고 한다. 이 당선인이 정당과 선거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치인보다 조직/선거 전문가를 선호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인도의 고도 발전된 과학기술, 인터넷, 아이티, 소프트웨어분야 세계적으로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함께 공동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들과 정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2030년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 못지않은, 오히려 부분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한국도 인도의 과학자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그 분야 산업에서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에 있는 기업인들도 한국에 깊은 관심 가져 주시면 양국에 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명박 당선인의 입장은 중국으로부터 경계심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언론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소개하면서 친일 반 중국 인사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인터넷사이트인 중국망(china.com.cn)은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 후보가 정치적으로 친일에 가까운 인사라고 소개하고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동북아지역 정세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이트는 이 후보는 일본인에 의해 친일파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가 오사카 출생이고 명박이라는 이름도 일본식 이름이며 그의 부친은 친일파라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망은 또 이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의 중국식 표기인 한성(漢城)을 '서우얼'로 바꾼 인물이라면서 이는 그의 반중국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둥지역에서 발행되는 신쾌보(新快報)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올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소개하면서 일부 분석가는 이 후보가 친일 반중국인사여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동북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 (CBS, 2007. 8. 22)

미국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중국위협론'(China Threat)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외 경제관과 이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반응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한미동맹강화론은 미국과 일본의 중국견제론과 맞물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경계심과 불신 그리고 견제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이 비대하고 첩첩이다. 이권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다.”, “당도 기업 최고경영자(CEO) 형이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인수위의 주도로 진행된 정부기구 통폐합(안) 마련으로 시작된 행정개혁은 행정비용절감이라는 관점 또는 국가의 규제 축소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³⁾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혁도 시도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현행 ‘18부-4처-17청-기타 17개 조직’으로 편제된 현행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대국(大局)’ 체제로 재편하고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고 인수위가 대부분 정부조직개편안에 반영했다. 특히 재정과 조세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대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기업 통폐합 및 민영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 방침은 이미 공약으로도 제시됐었다.

또한 교육의 자유시장화 및 ‘세계화’도 적극 추진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한국교육은 관주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 대학 등 교육주체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논리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자립형 사립고(특목고)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초등학교의 영어교육강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국어나 국사도 영어로 수업토록 하겠다고 했다. 사회 복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로 시장논리 또는 성장우선주의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그나마 사회복지다운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입장은 이미 한차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⁴⁾

이상에서처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당-선거-행정-교육-복지 등 다른 영역에도 시장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신자유주의적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외교정책과 남북관계

이명박 당선인의 외교노선은 남북관계 등 대외정책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및 국제공조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코리아’로 만들 것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세계를 만들어야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문명사적 전환기의 세계질서에서 **보편적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원적 국제관계 속에서 활발

3)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이 어떤 형태를 띄게 될 것인지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그의 이런 언급은 적어도 경제, 사회를 이끄는 힘의 중심으로서 정부기구나 우리 사회 곳곳에 개입해온 '얇고 넓게 퍼진 행정'의 범위를 축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2008. 1. 1)

4) 대선 기간 중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후보들에게 보낸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질의서에서 ‘필수 의료 행위만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체제로 바꾼 뒤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물었다. 그 뒤 의사협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는 당시 이명박 후보 쪽의 답신을 ‘찬성’ 의견으로 해석해 공개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난 뒤 온라인상에서 건강보험 폐지 또는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환자만 골라서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2007. 12. 29)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인류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를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공존을 통한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미래의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미동맹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글로벌 코리아’는 한국적 가치와 제도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국에 적용,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다. 보다 중요한 점은 그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또는 보편적 가치는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식 민주주의와 영미식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또한 국제공조의 강화는 미국의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2008년 1월 16일에 가진 신년외신기자회견에서 다음과 말했다.

저는 한국 경제의 번영이 곧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해외기업들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투자환경을 만들어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타파와 노사문제의 안정화가 시급한 선결조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노무현 정부가 지난 5년간 대체로 ‘남북관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노선’을 고수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제관계와 국제기준의 틀, 즉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180도 방향 전환인 셈이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할 경우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는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가치(예, 인권)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럴 경우 향후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외교부에 글로벌 코리아 기준에 맞춰 5년간의 정책수행에 대한 자성과 환골탈태를 요구하며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한 대응방식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간 참여정부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2006년을 제외하고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 내지 불참했던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유엔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을 표결할 때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기권했다. 새 정부는 국제 기준을 앞세워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라는 기준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인수위가 외교부에 대해서 안보와 인권, 경제협력에 있어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 문제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이명박 정부가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반도 적용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 남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인 문제, 안보문제의 해결을 남북 경제협력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나섰다. 참여정부에서는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대신 한일

관계는 악화됨에 따라 한·미·일 3각 협력관계가 크게 느슨해졌으나,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인 한·미·일 남방 3각 안보협력으로 대 북한 등 안보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를 해체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흡수한다는 인수위의 구상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통일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주축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럴 경우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국무부와 같은 위상으로 격상되는 셈이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이 “청와대, 통일부에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한군데로 통합, 총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의 큰 틀 아래서 외교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능통합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한 것도 외교부의 위상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새정부 대외정책 비교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p>동북아 균형자론 등 중립적, 자주적 외교노선 중시</p>	 <p>한미동맹, 한미일 3각협력 등 국제공조 강화 중시</p>
<p>남북관계 발전 및 긴장완화에 우선 순위</p>	 <p>남북관계에도 국제기준 적용, 원칙적 대응, 인권·안보문제와 남북경제협력 연계</p>
<p>남북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내외 정책추진</p>	 <p>북한 인권문제</p> <p>국제사회 및 남북관계에서 적극적 제기,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등에 적극적 의사 표시 및 헬싱키 프로세스 적용</p>

● 헬싱키 프로세스 (Helsinki Process)

1975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구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상호불가침, 경제협력, 인권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 헬싱키 협약을 체결했다. 구 소련권은 내정불간섭 및 주권 존중 등 체제보장에 비중을 둔 반면 서방세계는 인권문제를 모든 현안에 결부시켜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해 결과적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불렀다는 평가다.

자료: Korea Intercession Partners Group (2008. 1. 4)

여의도식 정치 탈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의회정치가 민생은 뒤로 하고 때로는 이념논쟁, 때로는 당리당략과 소모적 정치공방에 매몰되어 왔다고 규정하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 이미 미래로 나가 있는데 정치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 국민들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국회든 정당이든 ‘이념’이나 ‘당리당략’보다는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라 소모적인 이념논쟁 대신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정당은 인맥(계파)이나 학벌 또는 위계질서보다는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직책과 역할이 주어져야 하며, 공직 후보공천도 친분관계에 좌우되는 밀실공천이나 야합공천이 아니라 계량화되고 객관적인 능력이나 업적에 근거한 ‘시스템 공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가오는 총선 후보는 대선 기여도, 당선 가능성, 참신성, 개혁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이명박 당선인이 이러한 정당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내 경선에서 당원투표에서 패했으나 국민대상 여론조사에

서는 승리했고 선거에서도 국민의 압도적인 지를 얻어 당 특히 ‘구주류’에게 빚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역시 네거티브, 흑색선전, 정치공작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이미 허위사실 폭로자로 하여금 72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입증토록 하고, 입증에 실패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기업의 잘못된 정책 또는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항거하는 일체의 집단행동을 기초질서와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명박 당선인의 정치관은 자신의 배경이나 그간의 발언을 고려할 때, 다양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타협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갈등과 논쟁을 허용하고 어떤 점에서는 장려하는 다원주의적 정당정치를 ‘전문가 정치’(technocracy)로 대체하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⁵⁾ 다원주의적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그가 혐오하고 개혁하려는 ‘여의도식 정치’는 실제로는 자신이 속해 있는 한나라당과 다른 보수야당이 지난 10년간 행해왔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5일근무제를 추진할 때,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토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곧바로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낙인찍어 이념논쟁으로 몰아갔다. 사립학교법개정, 과거사청산 등 다른 정책을 다룰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런 점에서는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보수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였고, 일부 진보인사들도 그랬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중단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거나 악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인이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총선 이후 형성될 (아마도 일당우위의) 다당제 정국에서 나타날 야당으로부터의 이념공세(예, 반신자유주의)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고 자신과 신자유주의적 전문가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국운영방식’을 관철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당정분리’보다는 ‘당정일체’를 통한 대통령에 의한 여당장악, 국정조정 기능의 내각으로부터 ‘대통령실’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또한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여당과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할 경우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한 비판과 저항이 나타나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경우 경계를 중시하는 국민여론의 이름으로 가차 없이 탄압하거나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제왕적 대통령’, ‘위임민주주의’, ‘신권위주의’ 또는 ‘포폴리즘’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영국병’을 치유했다는 영국 보수당의 대처수상이 그랬고,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살린’ 남미국가들의 보수당 출신 대통령이 그랬듯이.

혹시라도 이명박 정부가 임기 중 ‘747공약’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에게 대형비리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을 시도할 수도 있다. 헌정질서와 관련하여 ‘4년 중임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정·부통령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5)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전통적인 여의도식 정치를 할 바에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며, 선거기간 중인 추석 연휴 이후 가는 곳마다 CEO형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가 강조하는 ‘CEO형 정치’의 핵심은 ‘효율성’ ‘적확성’ ‘탈이념 및 프로페셔널리즘’ 등이었다. (주간동아, 2007. 10. 9)

불도저식 리더십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의도식 정치에 대한 혐오는 ‘성공의 신화’를 축적해온 자신의 ‘불도저식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임은 새삼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청계천 복원사업, 서울지하철 파업 대응방식, 단말기 부착 등을 통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조성 등이 ‘불도저식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러한 ‘불도저식 리더십’은 단기간의 외형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나, 다른 기준(예, 환경, 유지비 등)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박정희식 단기의 외형적인 성과를 위주로 하는 산업화방식이 초래한 부작용은 1970년대 초반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 집권 당시 또는 이후에 발생한 수많은 대형사고가 잘 보여주고 있다. 재직 당시에는 무탈할지 몰라도 후속 정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명박 당선인의 ‘불도저식’ 결과지상주의적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그가 세우려는 기초질서와 법질서가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BBK사건’이다.

김종필 한나라당 선대위 명예고문이 17일 “**이명박 후보가 나에게 ‘(비비케이) 개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망에 걸릴 일은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필 고문은 이날 충북 충주 지원유세에서 비비케이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를 변호하는 취지로 연설을 하면서 “금년 초 이명박 후보를 만났을 때, 이 후보에게 다짐을 받은 바 있다. 비비케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나에게 솔직히 말해 달라고 했을 때, 이명박 후보는 ‘내가 개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망에 걸릴 정도의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2007. 12. 18).

특검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자신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을 알지 몰라도 한나라당 의원이나 관료들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민주적인 과정보다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할 경우 특히 자신이 임면권을 가진 관료들이나 여당이 비민주적이고 불법한 방식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단기성과를 중시할 경우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그만큼 줄어 권위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탓인지 그는 “시대는 저에게 **창조와 실용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활력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고 하면서 동시에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민주적 설득의 미덕을 보이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경제를 꼭 살리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룰**” 것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국민 중에서 조직화된 국민, 특히 노동조합이나 진보적 시민단체, 야당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집단은 귀를 기울이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적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가 귀를 기울이고 섬기겠다는 국민은 정체도 불분명하고 자신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저항하지 않는 ‘온순한’ 국민 또는 사회집단(예, 기업인, 보수단체 등)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법으로

다스리고 정책의 혜택에서 배제할 집단도 생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런 만큼 국민통합이라는 약속은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권의 약한 고리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출범할 이명박 정권도 약한 고리가 있다. 일부는 초기부터 부각될 것이고, 다른 것들은 집권 중반기 무렵부터 나타날 것이다.

첫째, 한나라당과 지지·동맹 세력간 또는 내부갈등이다. 이명박정권 하에서 지배집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내 비주류 집단(김두연 의원, 박형준 의원 등 최근에 입당한 의원집단)을 핵심으로 하고, 이들은 한나라당 내 주류그룹(박근혜와 지지 의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 및 선진국민연대 등 뉴라이트그룹 등과 함께 국회를 장악할 것이다. 시민사회내 주요 지지·동맹세력으로 재벌집단, 보수언론, 보수적인 기독교집단, 고대동문회 등 학연·혼맥 집단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친미반북’ 신자유주의라는 큰 틀에서 하나로 묶여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거나, 정치적·경제적 자원(예, 공직후보자 공천 지분, 관급공사의 배정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공직 후보공천의 경우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공천을 둘러싼 주류-비주류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그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이다.

둘째, 통합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주요 야당들이 총선 전까지 현재 겪고 있는 내분과 서로간의 갈등 사태를 해결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국정철학이나 정책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지 못할 경우 총선 이후 이명박의 한나라당 정권은 대통령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 즉, 강한 야당과 약하고 분열된 야당의 상황이 향후 4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럴 경우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은 크게 약화될 것이고, 역사적 경험이 말해 주듯이 집권당은 부패와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한나라당 내부 계파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포크배럴(pork barrel)식 정책결정이나 시민사회의 재벌대기업, 보수언론, 뉴라이트그룹 등 시민사회내 주요 지지집단에 대한 보상지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자신이 ‘범망에만 걸려들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를 확산시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크다.

셋째, 이명박 정권은 단기성과 위주의 결과지상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다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747공약’의 가시적인 성과를 임기 중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부실정책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넷째, 임기 중 매년 7% 경제성장의 실현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설령 그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성장의 과실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성장의 과실이 분배될 때까지 시차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성장의 주요 수혜집단인 재벌대기업을 포함한 부유층이 성장의 과실을 자발적으로 서민들에게 분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경우 노동자 등 서민층은 단체행동 등 이명박 당선인의 기초질서와 법질서 차원에서 규제할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항할 것이고, 이명박 정권은 노골적인 권위주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만큼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식과 차기대권을 둘러싼 지배집단과 지지세력 내부 또는 각 집단 간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이외에도 대미종속성 강화, 중국과의 갈등 심화, 남북관계의 긴장 제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항의 주체와 방법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합신당은 물론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야당세력은 총선 때까지 내부분열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야당이 내부분열을 수습하여 총선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국정철학이나 정책에 대항할만한 국민적 설득력을 가진 대안이나 대응방식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야당세력이 위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명분이 충분하지 않거나 국민이 제대로 납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상점거나 옥외투쟁의 방식을 되풀이할 경우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민사회의 잠재적인 저항세력 중 가장 중요한 집단인 노동조합의 경우 양대노총 간의 경쟁대립 관계가 격심한데다가 내부분열조차 심해서 노동조합의 총단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국민여론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비판과 저항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책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로 진보적 시민단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시민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의정감시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금 전에 지적한 이명박 정권의 약한 고리를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가 비민주성이나 부패비리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로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야당(국회나 행정부의 내부사정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노동조합(필요시 파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 비판세력과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경우 자신이 부족한 사회적 정당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공공성투쟁'을 강화하면서 진보적 시민단체와의 실질적인 연대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할 것이다.

2008년 경제정세, 그리고 ‘진보’의 방향

정태인(민주노동당 서민지킴이 본부장)

1. 머릿말

- 이명박 선택의 경제적 의미 - ‘좌파 신자유주의’에서 ‘명실상부한 신자유주의’로
- * 정치학에서 국민의 ‘잘못된 선택’을 전제로 선거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불만을 더욱 악화시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임
- * 일반 대중의 불만은 나쁘지 않은 총량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별로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데서 비롯. 즉 양극화가 ‘노무현 심판’의 사회경제적 내용
- * 양극화는 금융 세계화와 정보혁명에서 비롯됐으며 중국쇼크를 직접 받는 데서도 비롯. 더구나 양극화 경향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은 아주 느리게 진행
- * 이러한 불만에서 영미권이 선택한 것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인데 이는 이들 경제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음. 김대중 정부는 IMF 요구 조건에 따라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정책(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선택했으며 참여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의 속도를 늦추고 몇가지 사회정책을 강화시켰으나 결정적으로 한미 FTA 협상 체결로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양극화 심화 메커니즘을 제도화
- * 이명박의 사회경제 정책 기조는 자발적 민영화(자유화)이며 이는 어정쩡한 신자유주의에서 노골적 신자유주의로 이전한 것을 의미. 한미 FTA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역전불가능한 것으로 못박는 제도화하는 역할
- * 국민의 이러한 선택은 의식 자체가 이중적이라는 사실도 반영. 즉 입으로는 공공성 강화에 찬성하지만 실제 개인의 행동은 공공성 붕괴 쪽을 선택(교육, 부동산, 의료 등에서 특히 죄수의 딜레마 선택). 이는 물론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데서 기인 = 신자유주의적 지배에 유리한 사회문화적 환경.
- * 그러나 이는 ‘파산하는 배에 막자로 올라타는 격’임. 영미식 시장만능론의 유포는 90년대 미국의 장기호황에 근거한 것인데 뒤에 보듯이 미국경제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침몰하기 일보 직전임.

cf)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에서 이런 변화는 새롭지 않음. 중남미 국가들이 개방/민영화로 위기에 닥치면 ‘시장의 부족’ 때문이라며 더 많은 개방/민영화로 나아간 것을 모방. 그런 의미에서 국민은 이번 대선을 통해 복구형은 물론이고 영미형도 아닌 ‘멕시코형’을 선택

- 이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는 경제 측면에서는 ‘경기’라고 불리는 순환적 측면과 ‘정책기조’(제도화와 행동양식의 확립)로 표현됐던 구조적 측면 양쪽에서 살펴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함의를 기술

2. 세계적 경제정세

o 미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제고

- 유가, 식량 등 원자재 가격 급등

- * 2008년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형성(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과거 유가와 비교할 때 73년 1차 석유위기 이후 배럴당 106-108달러, 79년 2차 석유위기 이후 배럴당 102달러) 되고 있으며 곡물 재고율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여 곡물가격 역시 폭등할 가능성
- * 곡가의 상승은 세계적인 이상 기후, 곡물 수요의 증가, 일부는 바이오 연료용 곡물 재배에 기인
- * 1972년 소련의 흉작으로 촉발된 곡가 폭등과 1973년 1차 석유위기가 결합된 상황의 재현 가능성(cf.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5% 정도).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곡물가격의 변화폭이 확대되고 여기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투기자본에 의해 가격의 급등은 실제의 경제상황 이상으로 일어날 가능성 농후

-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소비 축소(맨 아래 붙임 참조)

-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980년대 이후, 금융화와 버블경제의 결합(스톡의 금융에 의한 플라우화, 증권화)체제가 위기를 맞는 것을 의미 cf) 이른바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와의 유사성
- * 금융화와 부동산 버블(=자산주도형 경제의 특징) - 2001년 이후 (브릭스를 제외한)전 세계적 투자 정체
- * 중국제 등 값싼 외국 소비재의 수입과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 증가의 결합에 의해 유지되던 적자경제(수지적자, 재정적자)의 붕괴

- 쌍둥이 적자의 확대와 협소한 대응 정책

- * 급속도로 확대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 * 미국 경제의 신뢰 저하, EU의 상대적 안정, 브릭스의 성장 등으로 아시아 국가 등 후진국들이 미 채무성 증권, 달러 보유로 미국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메커니즘 약화

=> 그러나 미국의 정책 선택 폭은 극히 협소

-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버블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가치 상승, 수출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초래
- * 1980년대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독일, 일본이 금리를 더 내리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플라자 합의) 중국은 자국의 경기억제를 위해 금리는 서서히 올리겠지만 위안화 절상은 최대한 억제하는 상황(즉 중국, 러시아 등 미국 의존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숙 대국의 존재로 국제협력도 어려운 상황)

- 세계적인 분배 악화 → 소비 증가의 한계

*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의 등장 → 세계의 제조업 노동 공급 확대에 따른 임금 하락, 브릭스 등의 곡물 생산의 감소와 소비 증가에 따른 세계적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 브릭스 등의 에너지 소비 급증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 (브릭스 일부 제조업, 선진국 금융 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노동자 계급 삶의 질 저하. 세계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증가, 노동소득 분배분 하락의 원인

* 다자주의 세계화(WTO)에는 다소 효과적으로 대응했으나 양자주의적 세계화(FTA)에 대해서는 국제연대의 대응 미흡 (반세계화 운동의 결과 FTA 전략이 유효하게 됐으며 현재까지는 각개 격파되고 있는 상황 = '경쟁적 자유화'의 목적 중 하나). '공정한 무역' 등 대안운동은 극히 미흡한 상황

- 중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 현재 중국경제 역시 버블 가능성을 내포. 중국정부의 경기 억제책이 소프트 랜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

* 올림픽, 엑스포 등 경기 자극적 요인이 내재한 가운데 경기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은 분배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 선진 경제의 침체, 또는 정체 속에서 중국경제가 미국경제의 역할(세계적 수요의 자극)을 하지 못하는 경우(그러나 중국은 미국 GDP의 약 1/5, 미국 수입의 약 1/8에 불과) 중국,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중국 27%, 미국 15%)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현재의 세계는 1) 수지 흑자국과 적자국간 국제적 불균형 2) 각국 내부의 불평등 3) 세계의 양극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폭력적인 조정=경제위기로 치달을 가능성 농후. 2000년 닷컴 위기 때처럼 금리인하 등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조건.

3. 한국 경제정세

(1)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현실로 후퇴 = 다행>

- 7%에서 6%로 하향 조정, 실질 성장률을 잠재성장율로 조정

* 7%를 무리하게(인위적 성장정책으로) 달성하겠다고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잠재성장률을 7%로 올리겠다는 것은 더 무리한 목표. 기술진보(총요소생산성)로 2%포인트의 추가 성장을 하겠다는 것.

* 기술진보(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이 높은 선진국(1인당 GDP 2만달러 이상)의 평균경제성장률이 3%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보면 잠재성장률을 7%로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 어떤 정책으로 총요소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

- 부동산세제 1년 시행 후 변경

- * 현재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할 준비가 돼) 있으므로 약간의 정책 변화에도 가격 급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총선에 영향을 주게 돼 있음. 이에 따라 원래의 공약인 종부세 인하 등을 뒤로 미루고 양도세의 인하에 신당과 합의.
- * 그러나 총선 이후,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상류층의 불만이 높아지면 종부세 인하를 비롯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을 약화시키고 용적을 제고 등 개발 이익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할 것이 틀림 없음

- 유류세 20%인하에서 10% 인하로

- * 현재 탄력세율 적용에 의한 인하폭은 10%가 최대치라는 사실을 반영

<가시적 성과를 향한 폭주> - 벼랑으로 내몰린 국민의 삶 : 반대 그룹이 뚜렷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장기에 걸쳐 나타나고 당장 재정 투입이 적은 사안인 공기업 민영화를 우선 추구

- 특히 민영화는 세금 인하로 인한 재정문제를 해결해 줄 최고의 카드로 부상

- * 산업은행 투자분야 민영화
- * 민간보험의 확대에 시작하여 당연지정제 폐지, 병원 영리법인화로 전개될 의료 민영화 : 정권 말기 경제자유구역에 대폭 확대. 이미 당연지정제는 폐지되었고 향후 건강보험도 선택 사항으로 바뀌게 될 것
- * 한전, 개스 등 참여정부에서 동결시켰던 민영화 재개
- * 김현종이 한미 FTA에서 약속한 우체국민영화는 정통부의 폐지로 급진전할 가능성

- 재벌규제 완화와 삼성은행의 탄생

- * 출총제 폐지 - 인수합병 형식의 새로운 분야 진출
- *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법 개정과 산업은행 민영화는 삼성은행, 또는 재벌컨소시엄의 은행 탄생 예고
- * 더구나 예산처의 기획기능과 재경부의 정책 총괄기능을 합친 기획재정부의 신설, 그리고 재경부의 금융정책과 금감위를 합쳐서 금융위원회를 만드는 조직개편은 구 모피아 조직에 의한 경제정책의 완전한 장악을 초래. 특히 금융정책과 감독을 한 기구에 두는 것은 감독유예라는 감독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불러 금융위기를 예비.

- 한반도 대운하와 전 국토의 투기장화

- * 민간자본 유치, 외자유치는 동일하게 환경규제, 노동규제 등 사회적 성격의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작용
- * 한반도 대운하의 각 구간은 투자수익률을 확보해주기 위해 각종 특혜가 부여될 것 - 한강-낙동강 줄기를 둘러싸고 호텔, 골프장 등 주민의 이익과 무관하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업소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사업을 광역으로 확대하는 '5+2 광역경제권 구상' 역시 광역별로 각종 개발특혜를 약속하고 있음. 이는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특구의 토지투기 붐을 광역으로 확대할 것이 틀림없음. 사실상 전 국토의 투기장화

- 교육 민영화

* 3불정책의 폐지와 자율형 사립고의 난립. 사교육시장의 급팽창

* 영어교육강화

->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지만 모든 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

“그들 말대로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그것만으로도 들쭉이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사교육기관 주가는 아마도 총선 이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치솟을 것이다”

- 의료민영화

*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 병원 영리법인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가 공약이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인수위에서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

cf) 시장에 맡긴다와 시장의 특권적 행위자인 재벌을 지원한다는 것의 차이. 오직 외자와 재벌의 대결로 국면을 단순화할 것(국민은 둘 중 하나를 선택?).

=> 전체적으로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분야 = 건강보험(정보의 비대칭성), 금융(시스템위기의 가능성 때문에 감독이 대단히 중요), 환경(외부성), 교육(외부성, 가치재의 특성), 네트워크산업(자연독점, 교차보조의 필요성)의 민영화를 추진

- 지난 10년간의 정부는 이러한 분야의 민영화는 신중하거나 복지의 확충과 병렬하여 시행했지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그러한 장치 없이 급진전될 것.

* 한미 FTA와 더불어 이러한 정책은 97년 이후 급진전된 양극화를 극단으로, 역진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것

- 보통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어 할 부분은 건강보험 등 의료체계의 변화와 교육분야일 것. (부동산정책은 일단 후퇴하여 총선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 회피). 교육분야는 중산층의 이중 의식 때문에 당장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겠지만 1-2년 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고 당연지정제 등은 바로 문제를 발생시킬 것

(2) 경제 예측

- 2008년 경제전망

* 거의 모든 국책기관이 4% 후반대의 성장을 예측

* 대외조건 악화, 산업생산 증가의 둔화, 재고 증가의 확대는 앞으로의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

고 예고

-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이명박 정부는 더욱 더 노골적인 개방과 규제완화 정책을 사용할 것

* 내년 한반도 대운하 착공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등 토건에 의한 경기부양

* 민영화,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 및 소비증가

->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은 앞으로 1,2년 동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인위적인 수요확대와 유가, 곡가 등 비용상승이 겹쳐서 인플레이션 우려

* 성장률, 주가 등 지표는 상승하는 가운데 서민의 삶은 더욱 악화 -> 국민의 불만 고조

=> 2.3년 후 중국의 침체가 본격화한다면 한국경제는 97년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 농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현재 금융위기의 직접적 영향

* 한국의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 보유 규모는 1000억-2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듯. 그러나 한은 등이 미국정부기관(페니매 등) 발행 서브프라임 증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미지수.

* 한국인의 미국 보유 자산 가격 하락이 한국의 소비를 줄이는 경로도 미미할 것

* 단 중국펀드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손실 예상 - 07년 11월에서 08년 1월까지 7조 8000억원 순자산 감소

* 그러나 미국의 소비 감소, 중국 금융의 혼란 등으로 인한 간접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

* 08년 2월 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94.8로(07년 10월 116.3) 곤두박질치는 등 심리적인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음.

-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1994년 이후 시작된 개방/민영화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고 그 부작용, 즉 양극화의 원인이 '명실상부한 신자유주의'로 밝혀지는 시기가 될 것은 100% 확실

* 미국식 시장만능론은 90년대 미국의 장기호황으로 더욱 강화됨. 이는 일본의 장기침체와 맞물려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음(김현종의 발언). 그러나 미국형 자본주의=금융화의 세계화는 현재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임. 이 시기에 대외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대내적으로 미국보다도 더 노골적인 시장만능정책을 사용할 경우 한국경제는 거의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

* 그러나 세계의 경험, 특히 중남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민 삶의 피해,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위기가 오더라도 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음 - 이 측면은 운동의 주체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대중의 신뢰를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

4. 맺음말 - 진보진영의 대안

- 한미 FTA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경기의 향방과 관계없이 사회적 양극화와 자연의 일방적 파괴를 불러 올 것

- * 2-3년 후 경제위기가 닥쳐올 경우에는 정치사회적 파국 상황 도래= 지난 20년 간 생성, 확립, 전개돼 온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격적 위기(87년 체제의 두 번째 심각한 경제위기)
- * 2007년 대선은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의 최종적 파탄을 의미(이것은 운동권의 NL-PD구도의 붕괴도 동시에 의미). 두 번째 위기는, 진보진영이 새롭게 정립돼 있을 경우에는 기회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서구가 경험한 '구좌파'의 운명을 걸을 것
- * 진보진영이 선도하는 **사회적 연대**(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부문운동 간의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공동체적 해법으로서의 모든 차원의 연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하나의 요소일 것

- 진보진영은 과학적인 예측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 * 87년과 같은 전국민적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여러 분야에 걸친 이슈가 각각의 계기에 따라 폭발하기는 하겠지만 97년 위기 이후에 관찰됐듯이 전 국민적 가두시위로 발전하기는 어려움
- * 4년 후 총선부터 정권에 대한 표에 의한 심판으로 불만이 표출될 것. 그러나 진보진영이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면, 현재보다 더 우경화한 자유주의 세력에게 정권이 돌아갈 가능성 농후
- * 앞으로 5년-10년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측 - 학술, 언론운동
- * 구체적인 정책 대안 및 총체적인 사회상 제시 - 국회 및 시민사회운동, 학술
- * 국민의 삶에 뿌리박은 실천, 특히 농업과 사회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풀뿌리 공동체 사업**에 주력하여 지역 교두보 확보 - 진보정당의 지역위, 지역운동

-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

- * 부문운동 경험 및 이론의 축적과 민주노동당의 종합 능력 향상
- * 그러나 이를 종합하는 정책기조의 성격(예컨대 자산재분배)을 규정할만한 이론적 발전의 미흡(세계적으로도 결여돼 있지만), 진보운동 전체를 포함하는 국가비전(예컨대 사회국가)의 체계화 등 상위 측면과,
- * 국민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는 성공사례의 축적, 정책의 실행계획(여론의 조성, 사회세력의 동원방식, 입법 전략)등 하위 측면 부족

- 에너지 및 곡물 가격 급등, 그리고 한반도 운하 등 토건국가 지향에 따르는 환경 파괴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됐던 **환경생태의제**, **농업 의제**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킬 것

- * 이에 대한 **시장 해법과 공동체적 해법(단순히 국가해법이 아닌)이 대립될 것**. 한국의 운동은 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다른 경제문제에서도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 *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시장과 과학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진영의 한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 금융 세계화, 그리고 에너지 및 생태 위기는 진보진영의 **국제연대** 필요성을 확대
- * 단순한 반대 시위, 시민사회의 부문별 연대를 넘어 국제적 운동의 시야를 확보해야 함.
- *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연대는 외교안보적 맥락에서도 대단히 중요

-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운동의 위기를 계기로 총체적으로 좌파의 이론 및 실천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대안 마련 필요
- * 이 시기에 실패할 경우 전통적 운동은 서구와 같이 과편화할 가능성 농후. 이것이 필연인지 아니면 전략 등 주체역량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분석해야
- * 특히 80년대의 경험, 이론상으로는 20세기 초반의 명제들에 의해 현실을 재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목하는 저간의 운동 현실이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괴리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
- * 대중의 불만이 공동체적 협력의 해법을 찾을지, 아니면 체념 상태에 빠져 '두 나라'(two nation)로 분리되어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는 사회가 될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음

<붙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전망

o 원인 1

- 그린스펀 2000-2005년 저금리 기조 유지(2003년 6월 1%로 인하한 뒤 1년간 유지) -> 부동산 거품
- * 집값의 100%까지 대출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 채권을 증권화(유동화) CDO(은행, 메릴린치 등 세계적 투자은행, 각종 증권회사) -> CDO, MBS에 기초한 파생상품 발행
- * 이는 집값이 오르는 한에서만 유지 가능. 일종의 폰지게임(다단계 판매는 새로 회원을 받아들이면 유지되는 반면 서브프라임모기지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만 유지 가능), 집값이 하락하는 순간 이자율을 올릴 수 밖에 없고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산 가게 파산, 모기지 회사 파산, 모기지회사에 돈을 빌려 준 은행 파산, 모기지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신용회사 부실화, 파생상품을 소유한 세계의 은행, 증권회사 부실 -> 전세계 불황의 가능성 -> 추가폭락=이중의 버블 붕괴

- 스티글리츠 "미국의 가계소득 증가는 자산거품에 기댄 부채였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 부시 행정부의 세금감면, 저금리기조" -> "성장율이 떨어지는 것 보다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문제" "금융세계화가 본격화된 시대의 선진국발 위기" "선진국발 위기는 대처하기도 어렵고 충격의 범위도 훨씬 넓다" ← 부실채권이 세계에서 팔렸기 때문(매킨지, 주식, 예금, 채권 등 핵심 금융자산 규모 2005년 기준 140조 달러 = 세계 GDP의 세배)

↔ 그린스펀 "저금리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에 과도하게 쌓인 저축이 미국에 흘러들어와 자산 거품 형성... 통화정책 이상의 문제" = 디스인플레이션 상황 > 디플레이션

o 원인 2 - 구조적 문제

- 미국의 구조적 문제가 저금리 기조에 의해 은폐되어 있던 상태 - 쌍둥이 적자 + 서브프라임 모기지 → 미국 GDP의 70%인 소비 축소(지난 10년간 미국 경제성장의 91%를 소비가 설명)

* CBO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 34.4% 증가한 2190억 달러에 달할 것(1.23), 민주당은 경기부양과 전비를 합치면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 미국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 = 세출 필요 증가

* 전비 지출 하루 30-50억 달러, 미 의회예산국 앞으로 5년간 이라크에 9000억달러 추가 지출 필요 +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비용, 의료비

* 도로, 교량, 항만 등 시설 노후화 교체비용 1.6조 달러

*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보다 22% 빠르게 증가. 베이비붐세대(7800만명)의 사회보장연금 수령 시기가 2009년

- 금값 상승, 지난 8월 외국 채권자들 1630억달러 미국 채권 대량 매각

- 원인1)과 원인2)는 서로 맞물려 있음. 금리 및 환율의 메커니즘이 미국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를 연결. 미국의 대외 불균형과 적자 누적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금융화와 값싼 중국제품 수입으로 은폐.

o 전망

-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것은 지난해 8월, 앞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는데도 6개월 정도?

*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거나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 07년 2월 부실 징조(모기지업체 파산) → 07년 6월 부실 본격화(헤지펀드 파산) → 8월 BNP 파리바(프랑스), 영국의 Northern Rock 파산 위기 등 전 세계로 파급 → 10월 이후 대형투자은행들 실적 부진 발표, 보증기관 신용등급 하향 조정 → 현재

* 2006년말 기준 대출규모 1조 4000억달러(전체 모기지 대출의 13.5%, 전체 개인신용의 11%).

* 유동화 증권 규모 06년말 기준 7600억 달러(전체 MBS=주택저당증권의 약 12%,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54% 유동화)

주택경기 둔화, 금리 상승 → 대출연체율 급증(85%가 변동금리), 06년말 14% 연체율 → 모기지업체 파산, 대형투자은행 부실, 보증회사 파산

* 파생상품 때문.. 미국 대형 증권회사,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기초로 여러 종류의 파생상품을 팔아서 전 세계에 판매. 각국 금융회사들은 이 상품에 기초해서 또 다른 파생상품 판매

* S&L은 실물경제로 이어졌지만 LTCM은 미미

* 부실규모 모른다 OECD는 피해규모를 2000억-3000억 달러로 추정, 도이치뱅크는 2000억-4000억 달러

* 금융 세계화의 정도와 미국 쌍둥이 적자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이번 사건이 S&L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쌍둥이 적자의 크기는 곧 미국 과소비의 증거.

- 추가하락

* 22일 종가기준으로 상하이 종합지수는 7.22%, 홍콩 H지수 11.97%, 영국 5.48%, 독일 7.57% 등 전세계로 번지고 있다.

- 달러가치 하락 - 지난 6개월 동안 주요 국제통화들에 대해 10% 이상 가치 하락, 달러가 국제 외환지불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07년 3분기 63.8%

=> 실물에 영향은 자금경색 : 자산 담보부 기업 어음 발행 위축 (07년말 7월 대비 34.3% 위축), 금리 상승, 대출 회수 등)

- 연준의 대응

* 기준금리와 재할인율 0.75%p 인하 → 3.5, 4.0%. “경제전망이 어두워지고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 (1982년 8월 이후 처음)

* 지난 주 발표한 1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확대도 시사

* 다행인 것은 국제유가가 텍사스산 중질유 기준으로 89달러 선으로 하락한 것

- 세계경제의 흐름

* 신중론과 비판론이 맞서다 이제는 미국 침체가 세계경제 동반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 영향 정도일 것이냐... 즉 그 영향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춰 하드랜딩 쪽에 기울어

* 디커플링론 : 중국, 인도, 러시아의 비중이 커서 미국의 영향이 적어졌다. IT거품이 꺼졌던 2001년처럼 동반침체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

* 현재 중국은 긴축기조로 가고 있는 중. 서브프라임으로 중국 내 3위 은행의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전체 보유증권의 3.05%, 4.4분기 손실액 24억 달러) 상하이 증시 급락.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여유

=> 그러나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크다는 점, 동아시아와 아세안의 수출증가가 중국의 수출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디커플링은 한계(미국-중국 축의 압도적 중요성). 그러나 올림픽, 상하이 박람회 등 특수가 있어서 지금 침체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2년 후 정도에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큼.

* 미국은 전 세계 총 GDP의 27.3%, 총 수입의 55%, 반면 중국은 각각 5.5%, 6.5% 차지.

- 8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의 최종적 귀결로 보는 견해도

* 스티글리츠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라는 점에서 과거의 금융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 마틴 울프(파이낸셜타임즈) “금융자본의 질주 정도가 20세기 초 금융공황 때와 비슷하다”

* 로고프(하바드대) “비대할대로 비대해진 금융자본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할 기회가 왔다. 현 상

황은 광산의 카나리아와 같다”

- * 루비니(뉴욕대) “미국경제의 후퇴가 적어도 3분기는 지속될 것... 유럽과 아시아 경제가 미국경제 경착륙의 영향권 밖에 있을 수 없다” “금리인하가 경기후퇴를 막을 수 없다”
- * 로치(모건 스탠리) “글로벌 경기후퇴가 눈 앞에.. 매우 고통스럽고 상대적으로 긴 경기후퇴가 될 것” “금리인하는 또 버블을 낳는 회복이 될 위험이 높다... 무모하고 위험한 조치”

<토론문1>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토론문2>

조원희(국민대 경제학부교수/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영태 관련 논평>

1.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기에 앞서 그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 지역주의를 넘어 정치가 이제 사회-경제-외교(남북관계 포함)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같은 한나라당이라 해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되었다면 지역주의, 남북관계와 관련된 이념대립구도는 연장되었을 것이다. 이 효과는 정치<이념>을 개별정책을 총괄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체계화하는 것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지금까지는 이념이 먼저 있고 정책은 나중에 나오는 식이었다.)

이러한 효과는 분명 한국정치를 '선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수년 뒤 이명박 정권이 부정적으로 비판받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 정책의 공과를 가지고 사고할 것이고 대안적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막가파식으로 감정적으로 이념적 딱지를 붙여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은 마찬가지로 정책지성을 가질 것이고 대안적 정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고민할 것이다. 또 정치인도 이런 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의 정치는 다 이런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한국정치도 이런 선진적 정치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두 발표자는 이명박 정부의 앞날을 비판적으로 보는 듯하나 성공하는 경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세계의 모든 정부가 그러하듯 신정권도 당연히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가운데 약점을 노출할 것이며 기회는 빠르건 늦건 항상 온다. 다만, 야당이 그러한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집권에 성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한참 upgrade 시켜야 한다. 이념, 국가비전 뿐 아니라 정책, 집행능력, 자질(전문성)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역량을 정당(주변)에 축적해야 경쟁이 된다. 이명박 정권이 원하던 원치 않든 이러한 정치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진보 정치라는 것도 이제는 국가를 관리할 정치적-전문가적 역량을 배양해야 하며 운동권 집단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켜야 한다. 한국경제가 붕괴하고 총체적 위기에 빠지고 정부가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정치적 기회를 엿보아서는 안된다. 문제를 이념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면 안되며 항상 정책적 대안과 관련하여 사고해야 한다.

2. 정영태교수가 지적하는 신정권의 약점은 그 태생적인 후진성과 관련된 듯하다. 성장제일주의, 성과주의, 대기업(재벌) 우선정책, 친미, 다원주의정치가 아니라 전문가 정치(기업경영을 국가경영에 확대하는 방식) 등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그런데 설령 이런 문제로 인해 난조에 빠진다고 해도 반대진영이 지리멸렬하고 시민사회단체나 노조가 극한투쟁을 벌이는 식으로 간다면 아마 정치는 더욱 반동화하면 했지 전진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이 선진형 진보정당으로 재구성되고 문제를 정치영역으로 수렴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상대의 실패가 기회로 되지 않을 것이다.

3. 필자가 지적하듯 신정권이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성장제일주의로 갈 가능성, 그리고 이에 더해 project 공화국으로 될 가능성은 농후하고 그것이 추진되면 될수록 국가 경제에 짐이 될 우려는 커진다. 신 발전체제라는 구상의 위험이다. 그런데 진보는 어떠한 대안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구상을 내놓을 것인가?

<정태인 관련 논평>

1.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신정권의 예견되는 본격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를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본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사고가 혼재되어 있는 듯하다. 총체적(거시적) 성과면에서 바뀔 거라는 예측과 사회양극화/환경파괴 같은 각론적 성과 지표의 악화 예측이 그것이다. 먼저 거시적성과 문제를 보자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최근 상황에서 3-5년 뒤를 양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필자는 너무 단언을 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3년은 과거 20년은 족히 되는 기간이며 누구도 자신있게, 대체적인 경향성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예측을 하기도 힘들며 또 그것이 신뢰를 갖기도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체적인 경향성으로 말하자면 논평자는 이명박식 신자유주의도 한국을 적어도 거시 성과 지표에서는 4만분은 모르겠지만 분명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선입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의 산업 구성은 다양하며 주지하듯이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물류, 유통, 통신 등에서도 앞서 있다. 교육양극화와 사교육의 비대가 문제일 수는 있으나 한국의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다. (문맹율로 치자면 한국은 영국, 이탈리아보다 몇배 낮다. 아주 최고 수준의 이른바 글로벌 인재가 부족한지는 모르나...) 모든 면에서 한국처럼 오로지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인간과 사회환경을 시현하고 있는 사회가 역사상 어디에 있었던 말인가? 본격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될 때 한국이 남북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이탈리아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양극화 시킬 것이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있는 예측이라고 볼 수 있으나 멕시코처럼 된다고 하면 과도된 판단이다.

2. 세계 경제 정세 등 총론적인 예측을 중시하고 있는데 세계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당장 봉착했다는 것인지, 몇가지 문제, 특히 금융세계화, 금융화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혹시 더 이상 탈출구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면 기타 문제는 애써 사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지나친 붕괴론적 사고로서 찬성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면, 또 한국이 사실 중심부 자본주의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금융화 같은 잘못된 경향에 대한 반작용을 예측하고 진보진영이 이에 대비하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3. 각론적으로 기업민영화, 금융규제, 대운하 사업, 교육민영화, 의료민영화, 한미 FTA 등에 대한 우려는 상당 정도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잔재와 관성이 상당 정도 남아 있으며 시장원칙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그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그것을 벗어날 경우에는 강하게 반대논리/정책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와 일치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 점에서 나는 북구모델, 보편적 복지를 지지한다.*

*논평자의 입장은 “세계경제의 현좌표와 한국의 선택”(대안연대회의(<http://position21.jinbo.net>)의 「진보의 재구성」에 수록)을 참조.

*한국경제에서 자영업(및 일부 중소기업), 대학교육기관 과잉의 지나친 비대화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여기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살려주자고 해서 안된다. 그렇다고 정당이 죽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시장 원칙을 강조하면서 다만 국가의 재교육, 복지 강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도와야 한다.

4. 진보진영이 총체적으로 자기반성과 갱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전체, 국민경제,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국가경영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진보, 좌파적 관점을 편파적인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전체의 보편적 이익이라는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

서구의 진보정치는 파편화되고 실패해서 더 이상 참조할 것도 없는 듯이, 그래서 지나가듯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엄연히 집권(가능)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고,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사민주의 정당을 가볍게 처리해도 되는가? 이명박 정부의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서구 사민주의 경험도 가볍게 본다면 혹시라도 이것은 그동안 진보진영이 보여 온 구태의연한 행태, 유연성의 결여, ‘선진적 모습’,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무감각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일 수는 없다.